

자금 쌓아둔 기업 많아 사업비 17조원 조달 가능할 듯

민자사업 전환...급물살 탄 목포~제주 해저터널

목포~제주 해저터널사업(이하 제주 해저터널)이 다시 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 2007년 이후 7년간 전남도 등 지방자치단체, 국토교통부, 중국 자본 등이 꾸준히 관심을 표명했지만, 구체화되지 못한 채 묻혔다가 다시 주체가 국내 건설업체로 바뀌어 재등장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나 전남도 등은 과거 이슈의 '재연'이라며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신공항 건설을 위해 용역까지 발주해놓은 제주도는 언짢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나 관련 지자체들의 이 같은 반응에도 국내 민간업체의 관심 표명은 제주해저터널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한층 높였는데 이견은 없다.

17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은 국비 지원 및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조달 가능하

고, 수요가 늘고 있는 제주관광 및 중국관광객 유입을 위한 위한 기반시설 성격이 강하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우선 지자체 간 입장을 정리한 뒤 올해 말 확정될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기본계획에 포함되는지가 1차 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잇을만 하면 등장하는 제주해저터널=제주해저터널은 지난 2007년 7월 동북아 해양 관광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 전남·제주도가 함께 국책사업으로 선정해 줄 것을 대정부 공동건의문으로 발표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후 한국교통연구원(KOTI)이 해저터널 건설 구상을 발표했고, 국회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지난 2011년 말에는 정부가 주관한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

정부·지자체·민간 분담

제주 관광객 급증도 '청신호'

연말 국가철도망 기본계획

포함 여부가 1차 관문

타당성(비용편익분석)은 0.84로 1에는 미치지 못해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가, 제주공항이 포화상태에 이를 정도로 제주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올 초 중국 자본, 최근 국내 건설업계에서 관심을 표명하면서 재부상했다.

그러나 관심 표명 수준에서 사업 착수가 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난관이 가로막고 있다. 우선 지자체들의 '미팅한' 반응이다. 신공항 조성 내지 현 제주공항

의 확장에 방점을 찍고 있는 제주도는 민선 6기 들어 제주해저터널에 대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전남도 역시 제주해저터널이 이낙연 지사와 맞붙었던 주승용 의원이 내놓은 공약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눈치다.

여기에 국토교통부 역시 민간 투자가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인만큼 정부, 지자체, 코레일 등의 적극적인 협력 체계의 구축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17조에 이르는 자금 어떻게? = 지난 2011년 정부의 타당성 조사에서 나온 예상 사업비는 16조8000억원이다. 물가 인상을 감안하면 17조를 넘어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단일 민간 건설업체로는 어렵고 컨소시엄을 구성하면서 동시

에 해저터널과 내륙구간의 공사 주체를 달리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보길도~추자도~제주도의 해저터널은 민간이, 목포~보길도 내륙 구간은 정부가 각각 맡는다는 것이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국내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자금이 쌓여 있는 기업들이 많다"며 "일정 수준의 수요만 유지된다면 장기적인 수익 창출 수단으로는 매력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말 철도망 기본계획 포함 여부가 관건=제주 관광객은 지난 2008년 500만 명 수준에서 2010년 758만명, 2013년 1085만명으로 1000만명을 넘어섰다. 이런 추세라면 2025년 1494만명, 2031년에는 1753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해저터널이 잠재적 수요를 늘리면서 제주도 관광의 새로운 전기를 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다. 항공이나 선박이 아닌 손쉽게 오갈 수 있는 수단인 철도가 놓인다면 기상 여건이나 휴일 여부에 관계없이 관광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송정~목포) 사업에서 나주, 무안공항을 경유할 경우 무안공항의 활성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성장 등에도 기여하는 등 부수적인 성과도 얻을 수 있다. 지역 기반시설에 '수요'가 보장되면서 제주도는 물론 호남권 전체의 '파이'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건설 전남발전연구원장은 "지자체, 정부, 민간기업이 각각의 역할을 나눠 이를 수행한다면 제주해저터널사업은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당장 연말 국가철도망 구축 기본계획에 제주해저터널이 포함될 수 있도록 뜻을 모으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연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동료의원 보호용” “세월호법 처리용”...방탄국회 공방

새정치 임시국회 소집 요구 의원 5명 오늘 영장 심사

여야 정치권은 20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날 밤 단독으로 8월 임시국회 소집요구를 한 것을 놓고 '방탄 국회' 공방을 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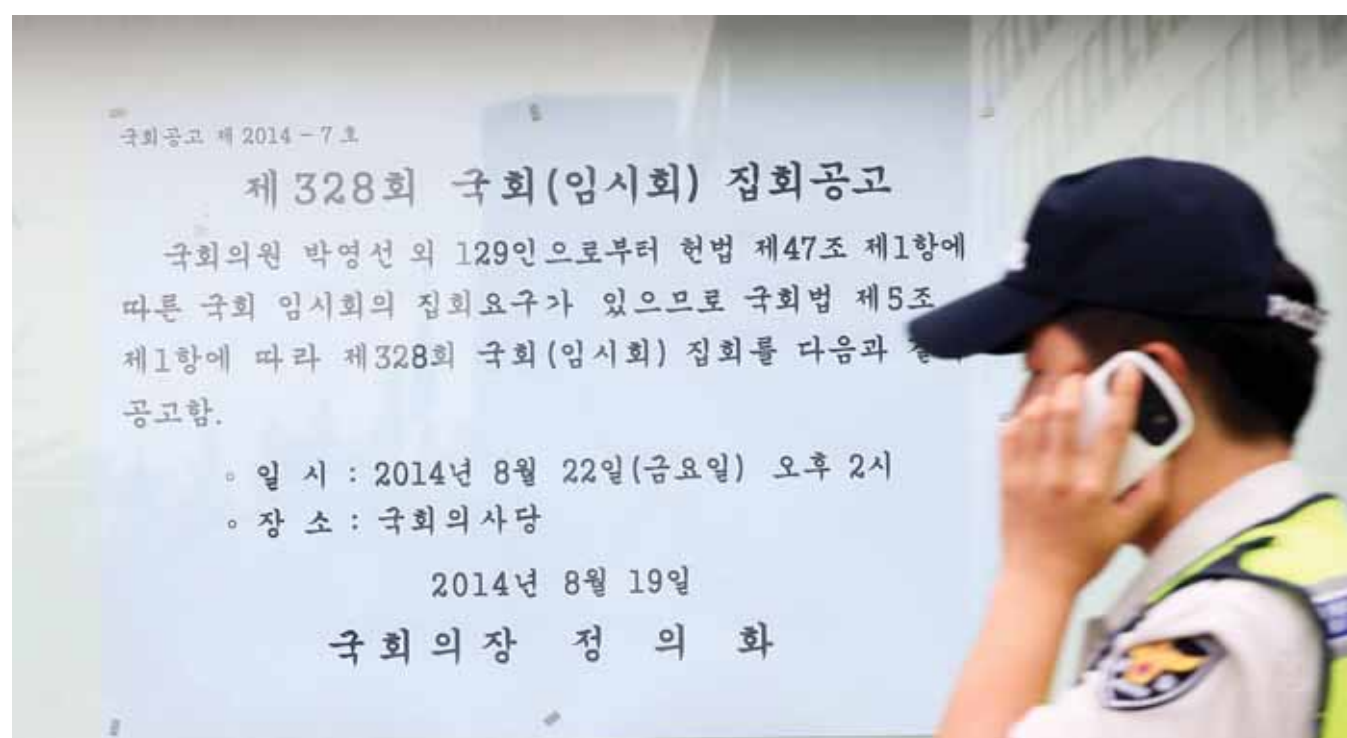
새누리당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동료 의원을 감싸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비판했지만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항변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검찰이 내사 또는 수사하는 의원들 문제가 아니라면 왜 이 국회를 소집해야 하는가"라며 "7월 임시회가 종료되는 12시(0시)가 되기 1분 전에 8월 임시회를 여는 이유는 국민이 걱정하시는 방탄국회라는 오해를 피하기 어렵게 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세월호 특별법도 처리 못 하면서, 본회의 개최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22일부터 회기를 열도록 요구한 것은 정말 눈에 보이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방탄국회가 아니고 산적인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요구한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25~31일로 회기를 정하고 25일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는 제안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단독 소집 요구는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한 것이라며 전방위적 '방어'에 나섰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새벽 의원총



20일 국회 정문 게시판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단독 요구한 제328회 임시국회 소집 공고안이 게시되어 있다. /연합뉴스

회 결과를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취재진으로부터 "방탄 국회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질문을 받아 연방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새정치연합은 야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사정 정국 조성을 통한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 조정식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야당탄압 저지 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하고 나섰다.

실제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전날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안 추진 여부를 두고 장시간

감론을박하던 중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소로부터 "방탄 국회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질문을 받고 연방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당내에서는 '방탄국회'라는 비판을 우려, 임시회 소집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과 새정치연합 신계륜(60)·김재운(49)·신학용(62)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21일 열기로 하고 심문용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조현룡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9시30분으로 예정됐다. 윤 부장판사는 이어 오전 11시 신계륜 의원, 오후 2시와 4시에 각각 김재운 의원과 신학용 의원을 심문하기로 했다. 심문은 모두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열린다.

인천지법 안동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새누리당 박상은(65)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21일 오후 3시 열기로 했다. 법원은 27일 자정까지 기한으로 하는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박진표기자 jkpark@연합뉴스

광주시도시철도 2호선 TF팀

일부 위원 편향성 반발·사퇴 '파행'

광주시도시철도 2호선 재검토 태스크포스(이하 태스크포스) 구성과 관련해 편향 논란이 이는 가운데 일부 위원이 태스크포스 기능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위원직을 사퇴하는 등 태스크포스 운영이 파행을 겪고 있다.

김동찬 광주시의회 부의장은 20일 오후 광주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태스크포스 2차 회의에 참석해 "지난 12년동안 논의해 (지하철 2호선을 건설하기로) 했는데 지금 태스크포스에서 뭘 하지는 것이냐"며 "지하철 2호선 건설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것인지 태스크포스 성격도 이상하다"면서 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히고 회의장을 떠났다.

김 부의장은 "대전은 지하철 건설을 위해 전문가 13명이 모여 집중적으로 토론했다. 우리는 위원 32명이 5분씩만 발언해도 3~4시간이 지나간다"며 태스크포스 효율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나석주 광주시도시철도공사 전략기획처장은 "태스크포스 위원 5명을 추가로 늘린 데 대한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100인 선정위원회에서 (지하철 2호선 건설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세대 간, 지역 간 갈등이 없도록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말

했다.

추가 태스크포스 위원으로 선정된 노미덕 장애우인권문제연구소 고문은 "저희가 마치 2호선 건설을 반대하고자 총원된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면서 "오해와 편견, 선입견을 풀지 말고 2호선 건설이 광주시 도시 활성화와 시민을 위해 효율성이 있는지 검토하자"고 말했다.

강신기 시 기획조정실장은 "어느 한 쪽으로 방향을 몰아가지 않는다"면서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장현 시장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이명규 광주대 교수는 인수위원이었던 변원섭 한국능률협회 호남본부장과 노미덕 장애우인권문제연구소 고문 등 시민단체 관계자 3명을 포함한 5명을 태스크포스 위원으로 추가로 추천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태스크포스 위원은 총 32명이 됐으며, 이명규 교수가 전체의 5분의 2가량인 12명을 추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교수는 지하철 2호선 건설에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태스크포스가 객관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오늘의 신문은]

세계 명사들의 특강

신문을 읽으며 훌륭한 사람들의 생각을 만납니다
그들의 생각과 지식이 나의 논리가 됩니다
신문은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입니다

누구나 배운다
"신문은 가장 큰 학교다"

한국신문협회
Korean Association of Newspapers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